



## 노동자를 위한 산업보건과 직업환경의학

현재 우리가 수행하는 산업보건 활동을 건강검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과 같은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들 사업과 제도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면, 노동자건강과 상관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최근 경험했던 메탄올중독사고,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들은 이들 사업을 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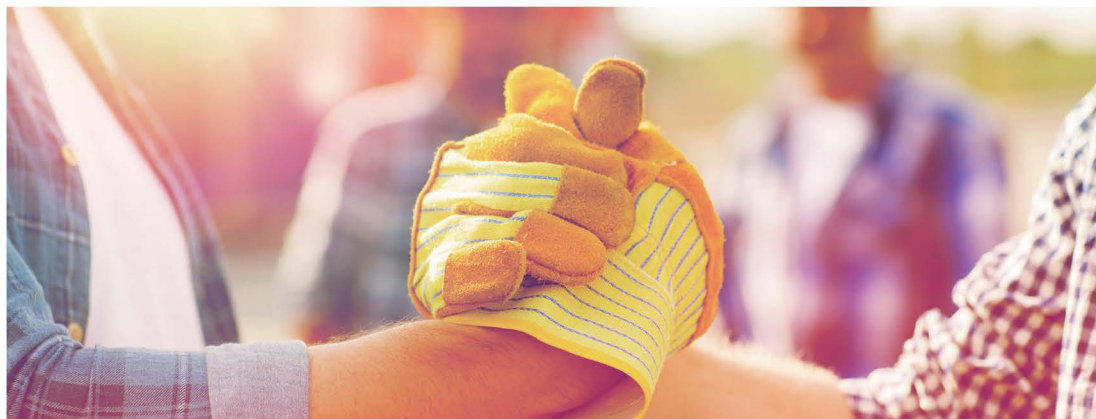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형렬**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을 만들기 위해 집단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음은 노동자를 위한 산업보건의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현재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업무적합성평가, 혹은 노동허가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현행 검사항목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종합적인 신체능력, 심리상태 평가를 통해 업무수행의 최적 상황을 조건화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보건의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구분될 수 없음에도 우리는 노동자들의 삶의 영역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교육, 주거, 복지 등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있는 문제가 다시 노동의 문제와



직업병 인정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질병판정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연결된다.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 안전, 교육, 복지, 주거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과정에 산업보건이 함께해야 한다.

셋째, 산업보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위험작업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복원하는 문제, 현장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작업환경을 바꾸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도,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 등,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들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정부나 몇몇 시민단체의 역할만이 아니라 산업보건의 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넷째, 직업병 인정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가능한 중장기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질병판정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요양의 실제 내용을 개선하여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병과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여 다시 재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의 개선 노력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획도 필요하다.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과감하게 바꾸어내는 것이다. 주치의가 직업병이라고 인정하면 그냥 직업병이 되는 제도도 가능할 수 있다. 산재노동자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충분히 재활하여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만 하면 된다. 그 외 제도적인 문제로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이 늦어지거나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소득보장) 강화, 요양기관의 질 관리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져야 하고, 이런 시각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공유해야 한다.

1995년에 산업의학 전문의제도가 시작되었으니,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보건을 탈피하고 서비스 직종을 포함한 모든 직업인의 건강문제를 다루겠다는 취지로 직업환경

의학으로 이름도 바꾸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모든 학문은 그 자체로 진보적일 수는 없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업의학 분야의 출발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먼저 대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늘 노동을 한 노동자가 내일도 건강하게 일하러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함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사고가 나서 사업주가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것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체제 유지의 첨병으로 사용되듯 직업의학도 자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했던 학문이다. 그렇다고 직업의학이, 사회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학문은 그 자체로 진보적일 수는 없다. 직업환경의학이 노동자를 위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조건은 단지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술, 담배 적게 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불건강 행위를 유발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직업환경의학은 이러한 “원인의 원인”, 즉, 불건강 행위가 건강에 직접적 원인이라면, 그러한 불건강 행위를 유발하는 직무스트레스, 장시간노동,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바꾸어내는 역할을 자신의 주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자기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맥락 속에서 직업환경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직업환경의학을 하는 사람들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를 위한 직업환경의학은 직업환경의학 의사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다양한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

